

246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3. 12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양재섭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정희윤

발행처 :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2018. 03. 12

	요약	3
I.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이해	4
II.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9
III.	생활권계획의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14
IV.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16

양재섭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049
jsyang@si.re.kr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25개 자치구와 주민 6천여 명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2014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해 2018년 초 확정·고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운영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가지 전제조건을 적극 검토해 보완

생활권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강화하고 방대한 계획 내용을 통합·조정하는 등 계획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권계획 실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절차 등 서울시 차원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활용방안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

생활권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련사업을 입안하는 근거 계획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단계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운영과정의 모니터링과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

국내 최초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으로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이해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로 수립된 상향식 중간단계 도시계획

서울시는 국내 처음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 수립·운영에 새로운 전기 마련

-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시·자치구·주민이 참여해 수립한 상향식 계획
 -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6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수립한 상향식 계획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립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생활권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초에 확정·고시
-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도시계획의 수립·운영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 생활권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수립지침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하나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
 -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활용해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연결되는 계획체계를 마련할 예정
 -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

생활권계획은 중간단계 도시계획이자 자치구와 주민이 함께 수립한 협력적 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줄이는 중간단계 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20년 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으로, 실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가이드하기에는 한계
 - 생활권계획에서 지역별 이슈와 공간관리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가이드하는 중간단계 계획 마련



그림 1. 생활권계획을 통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개편

- 서울시 실·국별 관련계획을 권역별로 통합·조율하는 계획
 - 생활권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계획 내용을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종합한 계획
 - 생활권계획으로 서울시 실·국별로 수립되던 도시공간, 주거, 교통, 복지·문화시설 등 분야별 계획을 한눈에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가능
-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역의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협력적 계획
 - 생활권계획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종합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자치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해당 지역의 발전방향을 담아낼 기회를 마련
-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
 - 생활권계획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주도하여 하향식으로 수립·운영하던 기존 도시계획과 달리,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을 지향
 -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생활권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과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수립

-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 여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
-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에서 권역별 이슈와 공간구조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생활권계획으로 구체화

2012년 사전 기획을 거쳐 4년간 계획 수립, 2018년 초 확정

사전 기획단계: 사전연구 및 생활권계획의 도입(2012.4~2013.11)

-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며 공감대 형성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사전연구를 진행해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2013)’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와 자치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권계획 필요성과 수립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계획 착수단계: 2014년 시범 생활권계획 수립(2013.12~2014.7)

- 5개 권역별로 총괄 및 부문계획가를 위촉하여 계획 수립
- 권역별로 계획 내용을 총괄하는 총괄계획가(4인) 위촉
- 권역별로 2~4인의 부문계획가(총 12인)를 두어 교통, 경관, 부동산 등 분야별 검토

-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시·구 추진조직 신설, 수립기준 구체화
-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전담하는 ‘생활권계획추진반’과 도시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국 추진팀(TF)’을 구성
- 일부 자치구도 주민참여단의 모집·운영을 위해 ‘생활권계획 추진팀(TF)’ 신설

계획 수립단계: 권역 및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2014.8~2016.12)

-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 수립
 - 권역계획은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권역별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지역생활권계획은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
- 지역생활권계획은 2014년 시범계획 수립 후 2015년 서울시 전체로 확대
 -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은 2014년 자치구별로 1개씩 지역생활권을 선정하여 시범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후 그 외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
- 116개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상향식 계획 수립
 -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 6천여 명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자치구별 주민워크숍 진행
 - 총 230여 회의 주민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활권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

계획 확정단계: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추진(2017.1~2018.2)

- 4년여간의 수립과정을 거쳐 2017년 5월 생활권계획(안) 공청회 개최
 - 생활권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활권계획의 안착을 위한 심포지엄’(2017.1.20.) 개최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공청회’(2017.5.18.)에서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생활권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확대

- 서울시는 2016년 11월과 2017년 5~7월 자치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 자치구별로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시의원·구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
 - 자치구의 지역생활권별 목표와 전략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2017년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18년 초 확정
 - 2014년부터 4년여간 25개 자치구와 6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생활권계획은 2017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초 확정·공고



그림 2.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공청회(좌)와 성북구 주민설명회(우) 모습

II.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생활권계획은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계획 수립

- '권역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5개 권역별 구상을 구체화
 - 권역별 미래상을 설정하고, 분야별 목표와 전략을 제시
 - 권역별 중심지 관리 및 육성,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한 권역 발전, 자족기반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에 초점
- '지역생활권계획'은 인구 10만 내외의 지역생활권별 발전 및 관리방향 제시
 - 자치구 내 3~7개의 지역생활권별로 인구·산업·토지이용·시설 등의 기초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이슈 도출
 -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도시계획 이슈와 관리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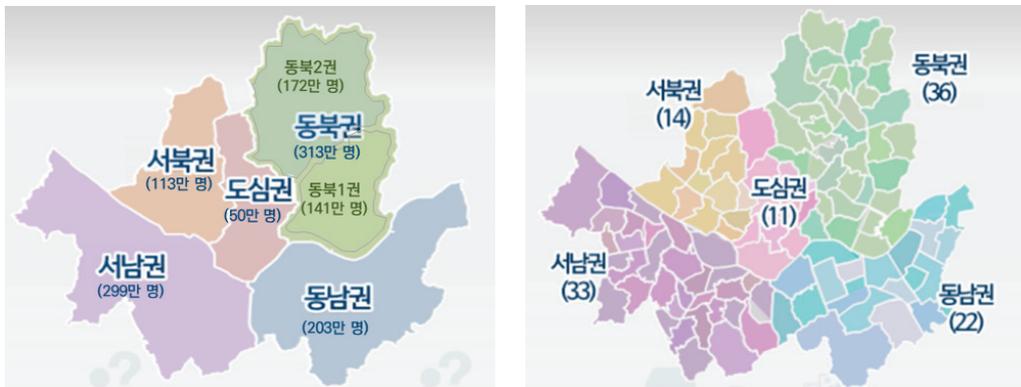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권역(좌)과 지역생활권(우)의 구분

자료: 서울시, 2017.5.14.,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기자설명회 자료, p.4.

계획 내용은 '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지침'으로 구성

생활권계획 내용은 지역의 핵심 '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지침'으로 구분

- 이슈별 계획은 산업, 역사·문화, 주거, 교통, 생활서비스 등 지역의 핵심이슈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
 - 이슈별 계획은 지역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으로 구성
 - 지역생활권별로 핵심이슈와 주민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슈별 계획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차별성 있게 구성
- 공간관리지침은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
 - 이슈별 계획 내용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성과 지침 제시
 - 중심지, 특성주거지역, 경관, 생활서비스시설 공급에 대한 관리 방향과 지침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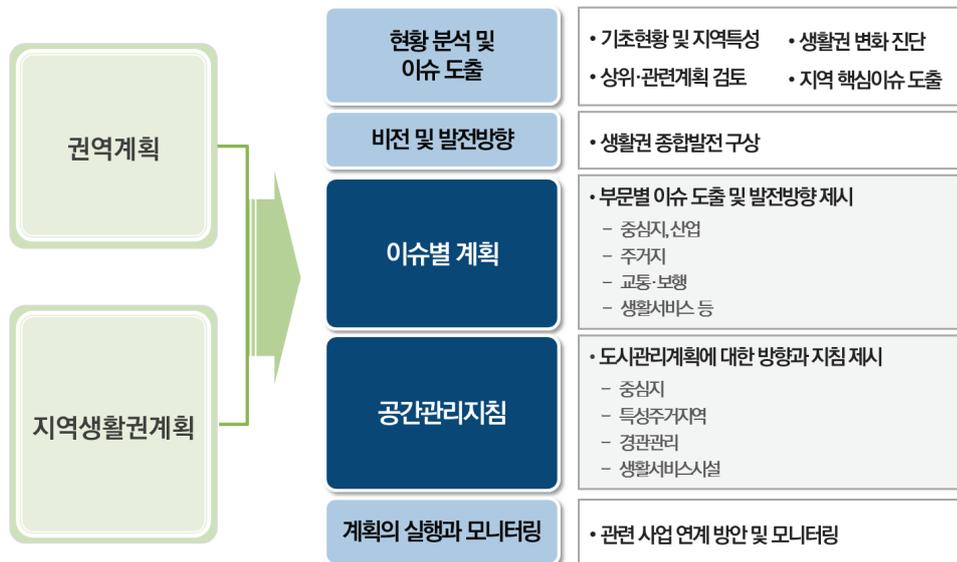


그림 4.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자료: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p.16 수정·보완

지역생활권계획의 주요목표와 실현전략을 ‘지역발전구상도’로 표현

이슈별 계획은 4~5개 목표를 설정하고 10여 개의 실현전략을 제시

- 지역생활권의 이슈별 계획은 4~5개 목표와 10개 내외의 전략으로 구성
 - 중심지 육성 및 발전, 주거지 관리, 교통·보행체계, 생활서비스 확충·개선, 지역특화 등 부문별 이슈에 대한 목표와 전략 제시
 - 사례로 살펴볼 성북구 성북·동선생활권계획(안)은 4개 목표, 8개 실현전략으로 구성
- 지역생활권별로 달성해야 할 핵심이슈별 목표를 4~5개 제시
 - 성북·동선생활권계획(안)의 4개 목표
 - ①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 ② 성북천 일대를 활력 있는 지역커뮤니티 및 여가 공간으로 육성
 - ③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정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
 - ④ 자연경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주거지 관리

「자연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성북·동선생활권」 조성을 위해

4 목표 + 8 실현전략 마련

목표 1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활성화	전략 1-1. 서울성곽 및 북악스카이웨이와 연계한 역사문화관광코스 조성 전략 1-2. 성북동일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북동 명소화 전략 1-3. 미아리고개 점성촌 관광활성화
목표 2 성북천일대 활력 있는 지역커뮤니티 및 여가공간으로 육성	전략 2-1. 성북천 복원구간 천변 노후건축물 정비를 통한 활성화 전략 2-2. 성북천 주변으로 밀집된 한옥보전 및 활성화로 특화된 한옥거리 조성
목표 3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3-1. 동소문로 중심가로 기능 수행을 위한 역세권 정비 관리 전략 3-2. 고려대, 성신여대 등 대학주변 문화 및 상권활성화
목표 4 자연경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주거지 관리	전략 4-1. 지역특성별 노후주거지 재생방안 마련

그림 5. 성북구 성북·동선지역생활권 계획(안) 예시

자료: 성북구 지역생활권계획(안) 공람자료;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planning.seoul.go.kr>)

- 목표별로 2~3개 전략과 세부 시책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3가지의 전략과 세부 시책을 제시
 - 성북·동선생활권계획(안)은 중심지 정비·관리와 관련하여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실현전략으로는 ‘동소문로 중심가로 기능 수행을 위한 역세권 정비 관리(전략 3-1)’와 ‘고려대, 성신여대 등 대학주변 문화 및 상권활성화(전략 3-2)’ 등을 제시
 - 전략별로 1~2개의 세부 시책이 제시되는데, 전략 3-1에서는 동소문로 중심가로의 기능 활성화와 역세권 정비·관리를 위한 2가지 시책을 제시
- 지역발전구상도는 목표와 전략을 종합하여 도면에 표현
 - 성북·동선생활권의 미래상인 ‘자연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권’의 이슈별 계획에 해당하는 목표와 전략을 1:15,000 정도 축척의 도면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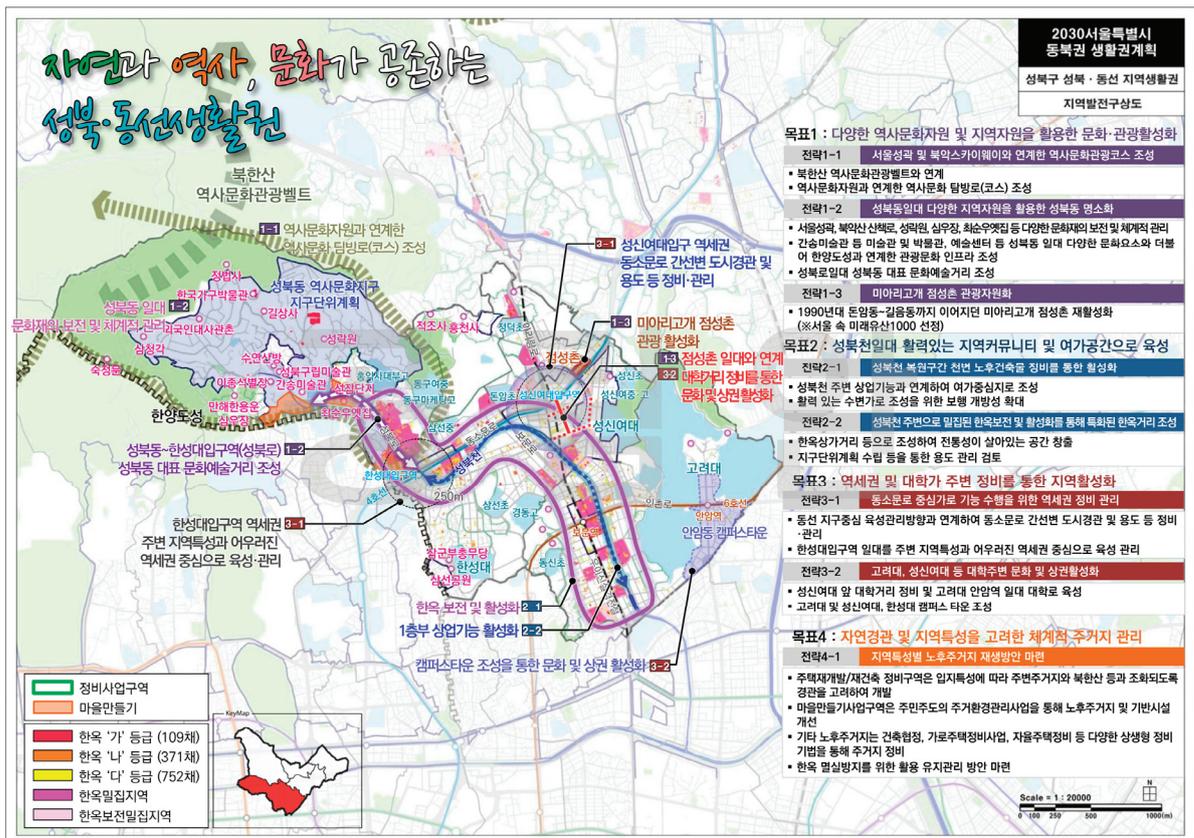


그림 6. 성북구 성북·동선생활권 지역발전구상도

자료: 성북구 지역생활권계획(안) 공람자료;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planning.seoul.go.kr>)

III. 생활권계획의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4가지 전제조건

생활권계획 내용, 자치구 여건, 운영체계, 법적 근거 등 지속적 보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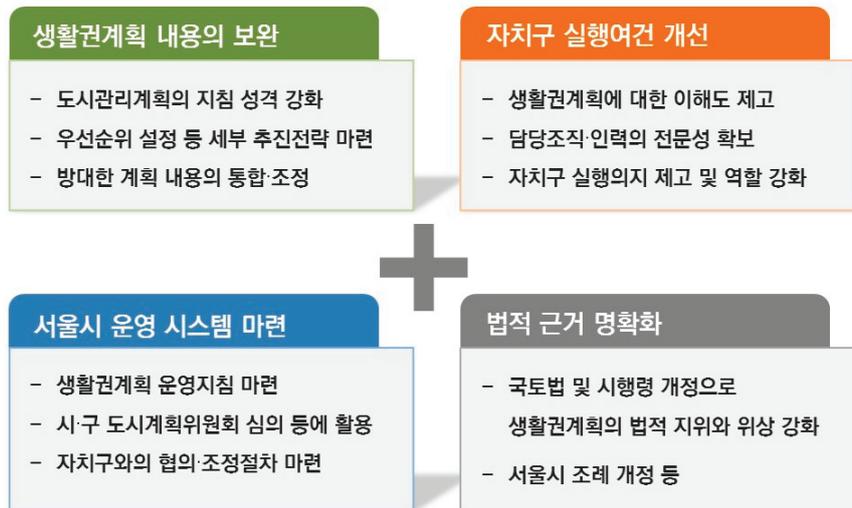


그림 8. 생활권계획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 전제 1: 방대하고 모호한 생활권계획 내용의 보완
 - 생활권계획은 중심지, 주거지, 생활서비스시설 등 분야별 목표와 전략으로 구성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내용이 방대하고 포괄적
 - 필요에 따라 생활권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더 구체적인 기준과 실현수단을 제시하여 생활권계획의 활용성을 제고
- 전제 2: 자치구의 생활권계획 실행여건을 개선
 - 현재 대다수의 자치구는 도시계획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하고, 자치구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생활권계획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실정
 -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실행여건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시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

-
- 전제 3: 생활권계획 운영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침을 마련
 - 서울시 차원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절차, 계획 수립·운영 과정에서의 서울시와 자치구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 전제 4: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현행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생활권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계획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한 실정
 - 생활권계획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계획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다른 관련 계획과의 관계 설정도 명확히 할 필요

IV.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생활권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모니터링하여 지속 보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강화가 필요

- 중·단기적인 생활권계획의 활용방안을 마련
 - 중·단기적으로 1) 생활권계획의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2) 세부 운영절차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며, 3)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추후 재정비 시 보완방향을 제시
 -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과정의 모니터링이 필요
 - 이를 토대로 이후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할 때 1) 계획 내용의 보완 및 구체화, 2) 자치구의 역할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생활권계획 활용 및 운영방향	생활권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 - 생활권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결정하는 지침으로 활용 -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검토 기준으로 활용
생활권계획 운영지침과 단계별 실행전략 마련	- 서울시 차원의 '생활권계획 운영지침' 마련 - 자치구는 단계별 실행전략(action plan) 마련 - '(가칭)권역별 자치구 협의회' 운영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 및 활용방안 마련	-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 - 자치구 차원의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마련
생활권계획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강화	-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
모니터링과 향후 재정비 시 보완방향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시행으로 계획 내용 보완 - 생활권계획 운영과정 모니터링 시행 - 계획내용 구체화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지침 성격 강화 자치구의 역할 강화, 서울시 자치구 간 역할분담 -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는 등 자치구 역할 강화 - 서울시-자치구 간 역할분담

생활권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결정하는 지침으로 활용
 -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의 중심지 및 주거지 관리,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지역특화사업,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지역생활권별 목표와 전략, 공간관리지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므로,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 및 사업을 입안하는 근거 계획으로 활용
-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
 -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체크리스트(check-list) 마련
 -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심의 기준으로 활용



그림 9. 생활권계획의 심의 활용 절차 예시

서울시 생활권계획 운영지침 및 단계별 실행전략 마련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치구는 실행방안을 구체화

-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활권계획 운영지침’ 마련
 -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의 생활권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권계획 활용 및 운영의 기본 방침 제시
- 자치구는 필요에 따라 단계별 실행전략(action plan) 마련
 -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중심지 육성,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의 단계별 실행전략을 마련.
 - 실행전략에서 단계별 추진 일정, 실현수단과의 연계, 추진 주체 등을 구체화

■ 사업화방안 / ■ 후속계획 지침 제시 / ■ 장기적 관리방향

목표	전략	우선 추진사항	기시행	중단기	장기
1 노량진 역세권 기능복합을 통한 중심성 강화	1-1. 노량진역 일대 문화·관광 중심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량진역 입체복합화 개발사업 (※ 구발전계획 기반영) • 저이용부지 관광숙박상업 복합개발추진 (※ 구발전계획 기반영) 			
	1-2. 노량진학원가 일대 종합적인 계획으로 교육·문화 중심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능, 노점거리 등 특화조성 계획검토 • 구청경찰서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구발전계획 기반영) 	(서울시가 수립 중인 노량진역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연계)		
	1-3.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고밀개발 을 통한 상업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고밀개발, 합필 및 공동개발 유도 등 후속계획 지침 			
2 주거지 특성별 생활환경 정비 및 관리	2-1.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촉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확충 포함 • CPTED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2-2. 노량진1동, 대방동 일대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관, 도서관 등 도입 검토 • 시설물·보도 정비 등 골목길 환경 정비 			
3 교통편의 개선 및 안전한 보행중심 가로환경 조성	3-1. 노량진로 및 노량진역 일대 교통편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 및 차로운영 개선방안 검토 •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등 • 전신주 지중화 등 생활가로 정비 			
	3-2. 생활가로 개선 및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 안전펜스 등 보행안전시설 확충 • 초등학교 부지 야간주차 검토 			
4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및 탐방코스 계획	4-1. 관광명소를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량진바다축제, 노점특화거리, 세계 불꽃축제 조망공간 확충 등 (※ 구발전계획 기반영) • 역사문화탐방코스 조성 검토 			
	4-2. 역사문화자원 연계 탐방코스 및 문화활력가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행정타운 연계 중심가로 조정, 가로활성화 용도 권장 검토 			

그림 10. 생활권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예시: 노량진지역생활권

○ (가칭)‘권역별 자치구 협의회’ 운영

- 현재는 생활권계획 실행 과정에서 자치구 의견이 서울시와 불합치할 때,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한 실정
- (가칭)‘권역별 자치구 협의회’를 운영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계획 내용과 지침을 조정할 필요
- 독일 베를린시가 시와 자치구 간 이견을 조율하고 관리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합치계획’(Dissensplan) 제도를 참고
 - 자치구의 관리계획 변경 요청이 반려되었을 때 불합치계획 대상지를 생활권 발전 계획 뒷부분에 수록하고, 추후 해당 계획의 변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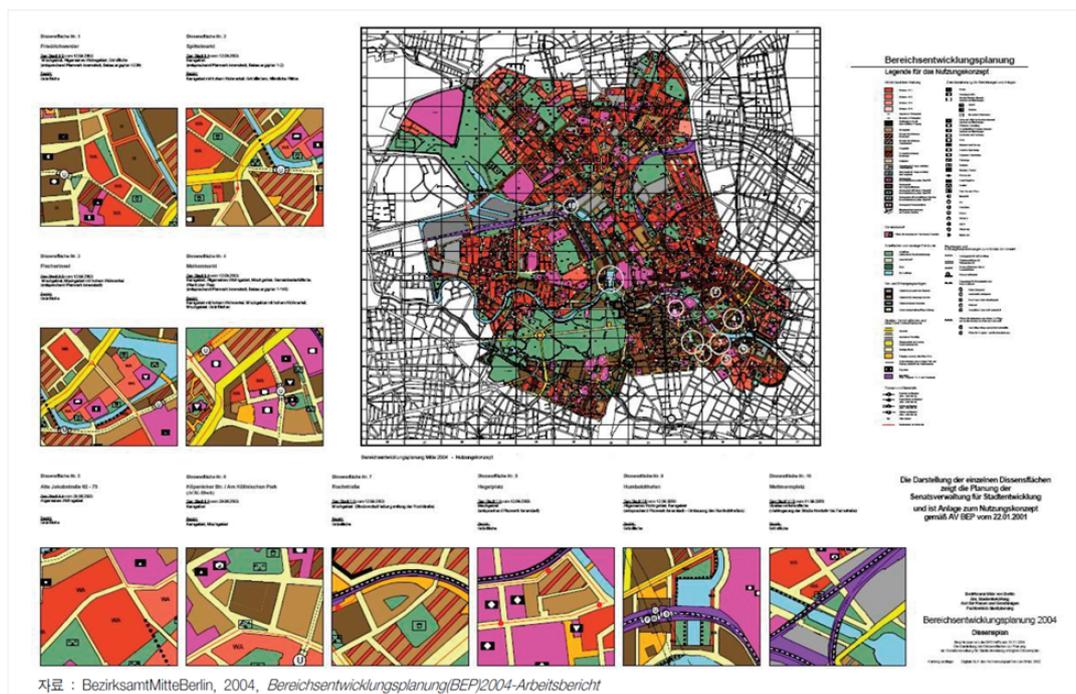


그림 11. 베를린 자치구 ‘미테’ 발전계획과 불합치계획 대상지

자료: BezirksamtMitteBerlin, 2004, Bereichsentwicklungsplanung(BEP)2004-Arbeitsbericht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 및 활용방안 마련

자치구는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확보·운영하고, 생활권계획의 활용도를 제고

-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을 강화
 - 향후 생활권계획의 재정비와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을 강화할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생활권계획의 실행과 운영에 전문인력을 활용
- 자치구 차원의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마련
 - 생활권계획 중 우선 추진할 계획 및 사업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사업화하거나 후속 계획의 입안을 준비
 - 생활권계획을 자치구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
 - 자치구 의견조사 결과, 다수의 자치구가 ‘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추진방안 구체화’(20건), ‘구 발전계획 및 업무추진계획에 반영’(14건), ‘관련부서와 협력체계 강화’(14건) 등을 후속조치로 고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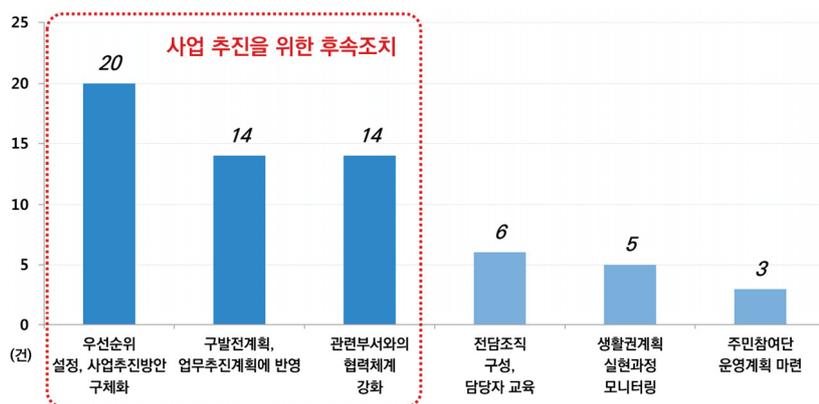


그림 12. 생활권계획 실행을 위한 자치구의 후속조치

주: 객관식 문답, 자치구별 3가지 복수응답 허용(24개 자치구 대상 총 62건)

-
- 생활권계획에 대한 교육과 홍보,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 필요
 -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생활권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관심과 협업체계가 필요

생활권계획의 법·제도적 근거 강화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등에 생활권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근거를 보완해 활용 기반을 확대

-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해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
- 국토계획법상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은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의 기준, 계획항목,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실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의 활용 기반을 확대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시행으로 계획 내용의 보완·구체화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과정의 모니터링 필요

- 생활권계획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 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
- 생활권계획 운영과정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과 달리, 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

생활권계획 내용을 자치구 차원에서 보완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강화

- 생활권계획 내용은 자치구 차원의 공통 지침과 개별 지침으로 제시
 - 향후 재정비 시, 지역생활권별로 되어 있는 계획 내용을 자치구 차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
 - 자치구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우선 제시하여 방대한 계획 내용을 간추리고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 공간관리지침은 공통 지침과 개별 지침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갖는 지침은 개별적으로 관리
-
- 도시관리계획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의 지침 구체화
 -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특히 중심지, 토지이용,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에 관한 지침 보완이 필요
 - 지역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도쿄도 네리마구의 지역생활권계획 중 ‘토지이용방침’ 등 참고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강화와 서울시-자치구 간 역할분담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서울시가 협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는 등 자치구 역할 강화
 - 앞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등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강화가 필요
 - 자치구는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계획에 부합하는 계획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서울시-자치구 간 도시계획 역할분담이 필요
 -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권역계획과 도심, 광역중심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
 -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되, 서울시가 협의·조정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



그림 13.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보완방향: 서울시-자치구 역할 분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